

국정원 정치 참여 제한...檢 6대 범죄만 수사

당정청, 권력기관 개혁 협의회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으로 대공 수사권 삭제키로

당정청은 30일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 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도 도입된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영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정원 개혁을 위해선 명칭 변경과 함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및 대공 수사권 삭제 ▲국회 정보위·감사원의 외부적 통제 강화 ▲감찰실장 직위 외부개방, 집행통제심의위원회 운영 등 내부적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관계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사의 일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마약·수출입 범죄는 경제 범죄에,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는 대형참사 범죄에 포함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부패·공직자 범죄의 경우에도 대상이 되는 공직자 범위의 경제범죄 금액 기준을 법무부령으로 마련, 수사 대상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경이 중요한 수사절차에서



‘긴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대검찰청과 경찰청 간 정기적인 수사 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검경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인권 보호와 적법절차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수사준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심야 조사나 장기간 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도 도입되며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에서 생활안전, 교통, 여성·아동·노약자, 지역행사경비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된다. 당정청은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이원화’ 모델 대신, 광역단위(시·도 경찰청)와 기초단위(경찰서) 조직을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자치경찰을 운영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이에 대해 “비용 과다 문제, 업무 혼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규모 재정투입에 따른 국민적 우려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문대통령 지지율 10주만에 반등

리얼미터 조사 45.6% ... 민주당 37.9%·통합당 32.6%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가 9주째 이어지던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전국의 유권자 1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2%포인트 오른 45.6%로 나타났다.

주간 지지도 조사에서 긍정 평가 비율이 전주보다 오른 것은 5월 3주차(62.3%-0.6%p ↑) 이후 10주 만이다.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2.1%포인트 내린 50.1%로 집계됐다. 이 역시 5월 3주차(32.6%-0.5% ↓) 이후 10주 만에 하

락 반전했다. 3주 연속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질렀다. 다만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차이는 4.5%포인트로 오차 범위안으로 들어왔다. 모름·무응답은 1.0%포인트 오른 4.3%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7.9%, 미래통합당 32.6%, 정의당 4.5%, 열린민주당 3.9%, 국민의당 3.4%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15.9%였다. 이번 조사는 TBS 의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통합당의 무기력

與 입법 속도전 속수무책...장외투쟁 소득없어 진퇴양난

미래통합당이 국회 개원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고 있다. 압도적인 의석수 우위를 바탕으로 한 여당의 밀어붙이기에 원내에서 대응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지만, ‘구테 답습’ ‘과거회귀’ 비판 우려 때문에 장외투쟁에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고민이 깊다.

실제 지난 28-29일 민주당이 임대차3법 등 부동산 법안을 상임위에 무더기로 상정해 반나절 만에 통과시켰을 때에도 통합당이 한 것은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고 항의의 뜻을 밝힌 것뿐이었다.

통합당은 30일 긴급 의원총회와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장외투쟁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대응전략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한 분위기다. 김종민 비대

나를 수 있겠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결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 수준이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무조건 국회에서 밖으로 튀어나와서 장외투쟁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정상은 아니다”라며 “최종적 수단이 장외투쟁인 건데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마철 폭우, 여름 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겹친 시기에 대규모 군중 동원이 불가능하다는 현실론도 이 같은 망설임의 한 요인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특하면 밖으로 나갔지만 빈손으로 돌아왔던 쓰라린 기억도 결단을 미루게 하고 있다.

대여 강경파로 불리는 김태홍 의원의 “지금도 더 명분을 축적할 시기”라며 현 상황에서 장외집회를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심상정 “초선 151명 국회서 뭘 배우겠나”

민주당 법안 단독 처리·통합당 무능 비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30일 부동산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로지 정부안 통과만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통법부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의 발목잡기 행태를 고려하더라도 이번 입법 과정은 매우 무리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심 대표는 “입법 과정은 법안 처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이기도 하다”며 “의식적인 토론으로 사실상의 심의 과정이 생략됐고, 다른 의원들의 관련 법안은 배제하고 오로지 민주당이 원하

는 법안만 골라 다뤘겠다”고 지적했다.

통합당을 겨냥해 “국토위원장만 맡았어도 최소한 야당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조건 반대와 퇴장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통합당이 장외투쟁과 같은 무리수를 두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초선 151명이 처음 경험한 임시국회 입법 과정에 여당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야당은 집권하면 배로 되갚아 주겠다고 보복을 다짐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광주시·전남도당 ‘되살아난 원팀정신’

위원장 경선, 집안 싸움 없이 송갑석·김승남 합의 추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전남도당 위원장 경선 과정에 ‘민주당 원팀’ 정신이 돋보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방선거 공천권을 손에 쥔 지역위원장의 위상을 감안했을 때 치열한 집안 싸움이 예상됐지만 출마자들의 ‘이름다운 사퇴’가 이어지면서 무경선 합의추대 형태로 지역 위원장 인선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민주당 전국 대의원대회가 축소되고 전당대회도 비대면 형태로

치러지는 만큼, 전국 시도당들은 앞다퉀 무경선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 있다.

30일 광주시당에 따르면, 현재 시장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갑석(서구갑) 의원이 이날 오전 차기 위원장 후보에 단독 접수했다.

광주시당위원장의 경우 애초 이병훈(동남읍)·조오섭(북구갑)·민형배(광산읍) 의원 등 3파전 양상이었지만 접수 전날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

민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이 의원과 조 의원이 이에 동조해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현 송 위원장의 연임이 논의됐고, 송 위원장을 합의 추대하는 방식으로 대의원대회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 전남지역 국회의원들도 김승남(고흥·보성·강진·장흥) 의원을 도당 위원장 후보로 합의 추대했다.

전남지역 의원들은 지난 23일 신정훈(나주·회순)의원과 김승남 의원 간 대화를 통해 도당위원장 후보를 김 의원으로 단일

화하는데 합의했다. 애초 도당 위원장 출마를 저울질 하던 주철현(여수갑) 의원이 출마를 접으면서 전남도당 위원장 경선에는 김 의원이 단독 접수했다.

김 의원이 지난 주 전남도당에 시장위원장에 단독 접수했다.

송갑석 시장위원장은 “호남인의 염원인 정권 재창출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광주시당부터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광주·전남시도당 대의원대회는 오는 8월 8일 열릴 예정이며, 단독후보일 경우 상무위원회에서 동의 여부를 물어 확정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킵니다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의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청단지점 576-4150